

생산성 향상 정책 세미나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자본력의 감소로 '요소의 집중투입(Input)'을 통한 성장은 점차 힘들어지면서 '산출(Output)'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생산성학회(회장·남명수·인하대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생산성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22일 오후 1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참석자

사회
김성수 (경희대 교수)

주제발표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신형균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토론자
이건희 (이화여대 교수)
김경률 (인천 KOTRA 소장)
이인수 (인천일보 경제부장)



김성수 교수

윤은기 부총장

신형균 센터장

이건희 교수

김경률 소장

이인수 부장

“디지털시대 기업도 변해야 산다”

‘제3세대 자본주의’ 신경영·신인재 요구

‘디지털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 방안’

오늘날 한국사회는 디지털과 민주화 물결이 결합돼 형성된 ‘디지털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됐으며, 경제환경도 ‘디지털 자본주의’로 바뀌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스피드, 투명성, 세계화, 융합화, 수평성, 평등성, 다양성, 분권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의식구조, 라이프스타일, 업무수행 방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인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세대 경영이 1920년대 이후 1980년대초기까지 ‘과학적 관리의 강조’, 2세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경영이론’, 3세대는 2000년도 이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정치경제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타난 ‘통합적 경영’이라 할 수 있다. 3세대에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인재가 중요한 활을 한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한 생산성 위기는 급격히 대두된 디지털 민주주의의 환경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부족해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전환될 때 뉴 패러다임이 요구됐듯이 이제는 초기와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됐다.

/이현규기자 h1565@incheontimes.com

주제 발표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주제 발표

신형균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22일 오후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성중기자 mungk303@

勞-使-政 혁신시스템 구축 생산성 연계 임금구조를

‘주 40시간 근무제 -생산성과 노사혁신 정책’

주 40시간 근무제 시대가 돌입하면서 시간단축과 소득 2만 달러 달성이 과제로 남는다.

노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구조가 만들어지고, 2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장이나 분배의 이분법이 아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이런 속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종합 생산성 혁신 방향의 설정’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정부’가 성장과 분배, ‘재계’가 부가가치(생산성) 경쟁, ‘노동계’가 임금·근로시간·경쟁력을 맡았다.

앞으로는 기업·산업 및 지역·노사·국가 생산성 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노·사·정 통합에 의한 중장기 생산성·임금 비전의 구체화 및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타파를 위한 중장기 비전의 설정 및 R&D, 부품소재·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정책 등 고부가가치 믹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산업별, 지역별 혁신정책에 노사참여의 분위기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재계’는 기업 투명성 확보와 신뢰 분위기 구축, 인적 투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중장기 생산성, 임금 계획 수립 등의 생산성과 노사관계 혁신 실천, ‘노동계’는 생산성과 임금협약을 통한 경영 투명성, 노사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곳곳서 ‘수평적 리더십’ 전환

이건희 이화여대 교수

현재 새로운 형태의 과학(Science)적 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수직적인 리더십도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유한 김벌리, 신세계백화점 등의 경영이 한 예다. 이 경영에서의 노사관계는 적대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사회에서 공공기관, 금융업 등 모든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와 조직 내부의 갈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승화시키면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더 높이고 넓게 해야 한다.

국내의 대기업들은 20~30년 후를 대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미래 전략을 고려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또 환경오염, 사회환경 등에서 생기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물들어 치솟은 원유가격 등 경제적 측면도 무방비로 맞을 수는 없다.

한국생산성학회에서는 경영혁신, 효율성 등을 통해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요 주제로 여기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악영향 해법을

김경률 인천 KOTRA 소장

인천의 경제 중 자동차부품 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기전이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2천~3천만 달러를 하는 업체도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OEM방식으로 한 진출이 활발하다.

지난달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20개사와 함께 한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바이어와 상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대우의 구매 총책임자인 앤더슨 부사장은 한국 상품의 품질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이 앞으로 20%이상 인상하고, 최근 원유와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전제 하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중적 가격 정책도 꼬집었다. 포스코(POSCO)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에너지 비용도 함께 덧붙였다.

인천 중기 자금난 해결부터

이인수 인천일보 경제부장

인천 경제의 양축은 제조업과 향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내에 많은 산업단지와 제조업체들이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로 느낄 수 없다.

우선 업체들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 업체는 자체적으로 ERP(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을 알아 본 결과, 1억원이 필요했다. 중기청에 지원받는 자금이 있었지만 턱 없이 부족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에 하청을 하는 업체가 많아 원청 기업의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향만 업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무관심한 편이다. 향만 업체들의 폐쇄적인 경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CEO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정책의 끊임 없는 개선, 지역 단위 종합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할 수 있다.